

## 남북통합과 민족주의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 1. 서론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화 및 초국가주의의 성장으로 인한 탈(脫)민족주의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근대적 과제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다. 민족국가는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완성되며, 그것은 바로 통일을 의미한다. 다행스럽게도 남북한은 60년 동안 분단 상황에 있으면서 적지 않은 이질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통일 성취를 위한 단초이자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의 민족의식은 서로 다른 체제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정치사회화의 영향을 받아 이질화의 과정을 밟았다. 그리하여 향후 남북통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질화된 의식구조를 동질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통합은 민족의식의 회복과정이자 근대 민족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공동체의 확립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공동체의 확립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남북한을 연결시켜 주는 핵심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남북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 이른바 한반도 문제는 민족주의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제주의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sup>1)</sup>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길은 민족성을 회복하는 민족주의화의 과정이자 당면한 국제성을 해결하는 국제주의화의 과정이다.<sup>2)</sup>

이 논문은 남북통합은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경제·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민족성을 회복하고 국제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족주의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민족주의와 남북통합의 의미

### 1) 한국민족주의의 방향: ‘인종민족’에서 ‘국민민족’으로

민족(nation)이라는 말은 민족, 국가, 국민 등 상황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어원적으로 혈통이나 가문을 뜻하는 말에서 시작된 이 말은 점차 습속, 언어 등으로 서로 구분되는 종족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18세기부터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국민이라는 정치적 의

---

1) 이 논문은 편의상 한반도 문제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민족성, 국제주의적 성격을 국제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이 논문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민족주의화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국제주의화로 정의한다.

미가 첨가되어 오늘날의 다의성을 갖게 되었다.<sup>3)</sup> 이런 가운데에서도 민족을 ‘인종민족(Volksnation)’과 ‘국민민족(Staatsbürgernation)’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sup>4)</sup>으로 마이네케(Meinecke)의 ‘문화민족(Kulturnation)’과 ‘국가민족(Staatsnation)’이라는 분류에 기초하고 있다.<sup>5)</sup> 마이네케에 따르면, 민족형성의 방법은 ‘국가민족(Staatsnation)’과 ‘문화민족(Kulturn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민족’은 개인·집단적 자결권의 토대 위에서 개인이 특정 정치·사회·문화공동체에의 소속을 표명함으로써 형성되는 민족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때 개인은 일정한 영토 내에서 특정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를 형성한 전형적인 사례는 영국, 프랑스, 특히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상, 인종의 기원, 종교적 신념 등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평등한 국가시민으로 구성된 정치·경제·사회공동체로서의 근대적 민족국가가 수립됨으로써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문화민족’은 공통의 혈통, 언어, 종교, 관습, 역사 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식으로부터 형성된다. 따라서 ‘문화민족’은 개인이 특정 국가에의 소속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민족공동체에의 소속이 역사적·자연발생적으로 결정되는 운명 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민족’은 공동체의식을 관리하는 정치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채 존속될 수 있다. 1772~1918년 3개국으로 분할된 폴란드,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되기 전의 독일이 여기에

3) U. Dierse und H. Rath, “Nation, Nationalismus, Nationalität,” in Ritter J. und Grunder, K.(Hg), *Historisches Woerterbuch der Philisophie*(Schwabe & Co.·AG. Verlag, 1984), p.406.

4) 위르겐 코카 지음, 김학이 옮김, “독일의 통일과 위기”(서울: 아르케, 1999), 210쪽.

5) F. Meinecke, *Welt rgetum und Nationalstaat*(Muechen, 1969), p.17.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민족’에 입각한 공동체도 19세기에 전개된 민족통일운동에 의해 점차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국가민족’으로 전환되었다.<sup>6)</sup>

따라서 인종민족이란 민습적이고 문화적인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에 관한 관념이 형성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마이네케의 문화민족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민민족이란 그 구성원의 평등한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이 구성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민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두 유형의 민족은 서양에서 에스노스(ethnos)와 데모스(demos)라는 집단구성의 전통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 에스노스는 습속, 풍습, 식민, 이주에 대한 기억을 근거로 혈통적 공통성에 대한 신화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인간집단을 의미한다. 반면, 데모스는 원래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영역 전체를 분할하는 기본 단위로서 지역구 혹은 지역구민을 가리켰다. 이 데모스는 혈통, 민속을 초월하여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 공동체에 속한다는 점에서 지연공동체를 의미한다. 평등한 시민권을 가진 지역구민, 즉 데모스의 지배체제가 바로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점에서 서양에서 데모스적 전통은 항상 민주주의적 요구와 연관되어 있다.<sup>7)</sup>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인종민족’과 ‘국민민족’은 혼합되어 등장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이 ‘국민민족’으로 구별할 수 있는 민족은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폴란드, 헝가리

6) 황병덕,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51쪽.

7) 한승완,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 철학』, 제1호(2001), 235쪽.

등과 같이 중부 유럽의 ‘인종민족’도 그들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면서 시민적 권리와 의무 체계를 발전시킨 결과, ‘국민민족’의 성격을 함께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두 유형의 혼재는 근대 민족국가의 이중성에 영향을 미쳤다. 근대 민족국가는 ‘국민정치공동체로서의 성격’과 ‘문화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이중성 속에서 근대 민족국가는 한편으로는 그 구성원의 개인적 시민권을 기초로 한 공화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추진하는 현실적 단위는 문화공동체의 틀 속에 있었던 것이다.<sup>9)</sup> 따라서 근대 민족국가의 이중성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하여 왔다. 특히, 이러한 긴장은 ‘인종민족’적 성격의 민족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 인종적 요소와 공화제적 요소 간의 갈등은 내부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종종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해 왔다. 반면, ‘국민국가’적 성격의 민족국가에서는 이러한 긴장이 비교적 비폭력적이고 협의적인 형태로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인종민족’적이든 ‘국민민족’적이든 간에 공화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이 근대 민족국가를 추동하는 긴장이었던 만큼, 그것에는 항상 위험한 측면이 내재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경우 그 위험은 갈등, 전쟁, 파괴 등의 현실로 나타난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이렇게 민족주의가 공화주의에 대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민족국가가 인종민족국가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공화주의가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화의 완성이 근대화에 내재하는 자기 부정적 계기의 제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근대 민족국가와 관련된 논의의

---

8) 이용희, 『미래의 세계정치』(서울: 민음사, 1997), 17쪽.

9) 한승완,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 철학』, 제1호(2001), 236쪽.

맥락에서 그것은 위협을 야기하는 전근대적 계기로서의 인종민족을 축소하고 근대적인 공화주의적 계기로서의 국민민족을 강화하는 방식일 것이다.<sup>10)</sup>

남북한은 분단시기 동안 철저하게 격리된 관계 속에서 전통문화가 이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혈통, 언어, 음식을 포함한 관습 등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전통적 문화의식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종민족 또는 문화민족에 입각한 민족적 동질성과 집단 의식에 토대를 두는 가운데, 한스 콘(Hans Kohn)이 지적한 것처럼, 문화적 자결(cultural self-determination)에 기초하여 정치적 자결(political self-determination)로 나아가야 한다.<sup>11)</sup>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은 혈통·언어·관습에 기초한 인종민족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에 기초한 근대적 국가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다.

## 2) 남북통합의 방향: 남북연합을 향하여

통합(integration)의 목표는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의 형성이고, 그 과정은 자발적이고 합의적이어야 하므로 강제와 강요에 의한 과정은 통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역사적으로,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장 현저한 시도들은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민족국가 건설과정은 반드시 자발적이고 합의적이지만 않을 뿐 아니라, 전쟁이나 침략처럼 강제적인 과정을 거치

---

10) 한승완,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 철학』, 제1호(2001), 239쪽.

11) Hans Kohn, “Nationalism,”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1(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p.65.

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sup>12)</sup> 그러므로 민족국가의 형성 모두를 통합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강제와 강요에 의한 통합과정으로서의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은 논의에서 배제한다.

통합의 목표가 자발적이고 합의에 의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정치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모습은 통합하려는 개체들의 상호의존도에 따라 다르다. 통합하려는 개체들 간의 상호의존도가 가장 긴밀한 정치공동체의 유형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형태를 갖는 단일민족국가이다. 다음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federation)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로서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유형이다. 국가연합의 유형은 국가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당면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상호의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가장 긴밀한 형태는 유럽연합(Europe Union)과 같은 국가연합체이다. 이 정도의 정치공동체는 통합된 단일헌법만 갖춰지면 연방국가(the united states)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상호의존도를 보인다. 다음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일반적 국가연합이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통합되고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정상회담, 각료급회담 개최가 정례화되어 상호 관심사 및 주요 정책을 논의·조율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과 같은 국가연합으로 구성국가들이 서로 공유하는 특정 국가이익, 즉 공동안보 또는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이다.

---

12) Graham Evans & Jeffrey Newnham,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enguin Books, 1998), p.254.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합하려는 개체 간의 상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단일민족국가 형태로의 직접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냉전적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간의 패권경쟁도 여전하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정치적·이념적 이질성, 경제적 불균형 발전,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배제한 채 민족주의적 정서를 앞세워 급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남북통합은 남북연합이라는 낮은 수준에서 단일민족국가라는 높은 수준으로 단계적인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sup>13)</sup> 특히, 남북연합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상호 공존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관계에서는 민족주의에 기초한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데 좋은 환경과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 3. 한반도 문제의 3차원 구조와 민족주의의 과제

#### 1) 남북한의 국내적 차원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사상으로 간주하던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민족주의를 이중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sup>14)</sup> 하나는 공

---

13) 한종수는 국가연합의 한 형태인 남북연합을 남북한이 지향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한종수, “독일의 국가연합과 한반도 통일방안,”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2호(2002)를 참조할 것.



<표 1>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sup>16)</sup>

시기	민족	민족주의
1960년대까지	<스탈린적 정의> ·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 ·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구분 · 민족 근대형성론 · 민족 소멸론	· 민족주의 배격 ·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1970년대	<스탈린적 정의와 북한식 정의 절충> ·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 혈통 추가, 언어 강조 · 국가의 형성과 함께 민족 형성	· 위와 동일
1980년대	<독자개념 구축> · 핏줄, 언어, 지역, 문화 · 핏줄과 언어 강조 · 심리상태와 경제생활 제외 · 연방제 통일방식과 연관성 부각 · 민족문제 해결의 선차성	·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반제적 측면 인정 · 우리민족제일주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등치 · 민족주의자 반대
1990년대	<민족자주성론> · 연방제 통일방식 강화 · 민족문제 해결의 선차성 강화 · 갑일성 민족 거론 · 민족 소멸론 부정	· 참다운 민족주의 · 민족사적 정통성 주장, 문화와 역사 강조

정적 의미로 부르주아혁명 당시에는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적 사상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민족주의

14)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북한은 민족주의를 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함께 신흥부르조아지의 이익까지 포괄하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반영한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된다. ② 삼민주주의의 하나. 외래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각 민족의 평등을 주장하는 주의. ③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는 어긋나게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구실 밑에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배격함으로써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을 조정하는 반동적 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는 ‘민족자결권’이나 ‘민족자주’로 발현되어 왔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 의미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민족배타주의’ 또는 민족허무주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sup>15)</sup> 이와 같은 민족주의에 관한 북한의 이중적 해석은 자신이 처한 역사적·상황적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항일 민족해방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분단이라는 역사적 조건은 민족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시하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상황적 조건하에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내부결속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략했다. 그러나 북한은 논쟁과 분란의 소지가 있는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북한의 전통적 담론들과 결합시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 등과 같은 체제수호 또는 체제결속 담론들이 등장한 것이다.

남한은 동일한 역사적·상황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탈(脫)권위주의와 민주화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주된 담론을 형성했다. 국가 차원에서 민족주의 담론 또는 이데올로기를 무리하게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근대화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유입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다만,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역사적 인물을 부각시키는 엘리트 위주의 민족주

- 
- 15)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 따르면, 민족배타주의란 “자기 민족의 리해관계를 모든 다른 민족의 리해관계에 대립시키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며 타민족에 대한 반목과 증오를 설교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민족허무주의란 “력사발전에서 자기 민족이 이룩하여 놓은 민족적 전통을 비롯한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부인하고 말살하는 사상이다”라고 정의한다.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254~258쪽.
- 16)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9년 상반기호(통권 제45호), 154~155쪽.

의 양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민족주체성 확립과 민족적 자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이순신 묘역 성역 및 충무공 동상 건립 또는 민족 전통문화의 재발굴 및 국학 운동, 정신문화연구원 설립, 삼별초 등 민족적 저항노력 미화, 충효사상 주입, 태권도의 세계 보급운동 등이 제창되었다.<sup>17)</sup>

동시에 남한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자본의 해외의존도 심화는 전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다. 이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화 담론의 유행과 그 뒷인 한국경제의 IMF 예속화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일본과 차별화된 평화를 애호하는 한국민족주의의 도덕성 강화, 한류(韓流)의 국제화, 그리고 공중질서의 준수와 시민의식의 발전과 같은 연성국력(soft power)을 꾸준히 강화·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연성국력의 증진과 함께 열린 민족주의를 부단히 심화시키고 확산시켜 왔으며, 이는 동북아지역 통합과 남북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각각의 대내적 차원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는 남북한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념이라는 점에서 향후 체제통합과정에서 효과적인 통합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 2) 남북관계적 차원

남북관계에서 남북한은 민족주의를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수단으

---

17) 배성인,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14권 제1호, 8쪽.

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발생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남 평화공존 분위기를 조성했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대대적으로 표방함과 동시에 남북한고위급대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북한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당면한 위협요인들로부터 모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핵 정세하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이완시키기 위한 전술로 민족공조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민족공조 공세는 6·15 공동선언에서 확인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에 기초하여 과상적이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과 관련, 6·15공동선언 이후 달라진 점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북한은 6·15공동선언 제4항의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아직까지도 민족주의를 남한과의 상호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남한을 이용해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이익확보 차원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민족주의를 북한과의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데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북핵 정세하에서 정부 차원의 민족주의적 접근이자 친 주변국들이나 국민들에게 감상주의적 접근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교류·협력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상호의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작사량’식 교류·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같은 민족끼리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비호혜적 민족주의관을 심어 주었다는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민족주의의 명분하에 남측은 수여적(授與的)이고, 북측은 수혜적(受惠的)인 비호혜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은 남한을 대내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트리는 민족공조 공세를 지양하는 대신 한반도 문제의 해결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진정한 민족주의 모습을 지향해야 하며, 남한은 호혜적 측면에서 상호의존도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체제수호적 목적에서 민족주의에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민족적 주체성이나 자율성은 침식당하며 남한의 대외적 자주성이 제약받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sup>18)</sup>

### 3) 국제적 차원

민족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의 국제적 성격 또는 특정 민족국가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민족은 내적으로는 동질성과 보편성을 추구하지만 외적으로는 차별성과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속성, 다시 말해 배타성을 내재하고 있다.<sup>19)</sup> 동시에 민족주의가 다른 민족과 차별화된 이데올로기 또는 대외정책의 독트린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에는 국제주의라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 역시 민족성과 국제성을 모두 갖고 있다. 다만 다른 민족 또는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성의 규정력 정도이다. 한반도 문제는 대부분 분단에서

---

18) 서동만, “북한체제와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4호(2002), 189~190쪽.

19) L. Mamora, *Nation and Internationalism*(Dortmund, 1983), p.79.

비롯되었고 그 분단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민족이나 국가들보다 국제성이 강한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정책 독트린으로 내세울 만큼 지난 세월 동안 한반도 문제는 철저히 국제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은 분단체제에서 각자의 민족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헤게모니 쟁탈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상호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목적에서 이용했다. 화합과 통합의 매개체이어야 할 민족주의가 반목과 대결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북한의 영토범위에 관한 논란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전문의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위업을 완수”라는 문구에서 북한을 ‘공화국 북반부’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전국적 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한이 공화국의 남반부, 즉 북한 영토의 일부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 남한 영토의 일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영토범위와 관련한 논란은 남북한의 문제를 초월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법적지위 및 남북관계의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이 상대방을 자국 영토 내의 불법집단으로 엄격히 규정한다면 남북한은 서로를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서 민족주의화보다 국제주의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각자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를 갖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된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이 민족성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거래관계는 국제법의 규정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여기에서 ‘특수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모호하지만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나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나 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sup>20)</sup> 그런데 2005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는 본 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를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북한을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로 인정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체제’ 인정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국가 또는 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0) 북한은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연형묵 총리가 보고했고, 12월 27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소집하여 승인한 후 김일성 전 주석이 최종적으로 비준하는 등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으나, 남한은 1999년 2월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특별위원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3월 8일 제2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II』(서울: 푸른세상, 2002), 89~91쪽.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민족주의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들은 국제주의화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 상태에 돌입할 경우, 북한지역은 남한 영토의 일부이며 남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므로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의 개입은 불법이라는 국제법적 보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라크사태를 포함하여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면, 국제정치의 규범론적 측면보다는 현실주의적 측면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적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힘 있는 자의 선점(先占) 원칙’이 작동해도 약소국으로서 불가항력적인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에서 민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주의화의 지평을 확대해 가면서 동시에 국제성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동맹(미국)과 민족(북한)이 적대관계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남한)이 적(미국)과 동맹관계라는 아주 특수한 구조하에서 무작정 민족주의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현실적인 방식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문화와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남북관계가 과거의 냉전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주변국의 동참이 불가피한 현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태도이다. 예컨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변국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화에 기초하여 국제주의화를 적절하게 조화



시키는 작업이 민족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 4. 민족주의의 방향

##### 1) 열린 민족주의로의 지향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을 통해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목표로 삼고 있는 민족주의만이 통일한국을 위한 이념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는 남북한의 상반된 분단이념을 초월하는 통합이념이다. 통합이념은 통합과정과 통합 이후라는 두 가지 시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통합과정에서의 민족주의는 통합을 추동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sup>21)</sup> 그러나 통합 이후의 민족주의는 통합된 국가 및 체제의 성격과 친화력(親和力) 있는 자유, 민주, 평등과 같이 이념적 가치들보다 그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 이후의 민족주의보다는 통합과정에서의 민족주의에 착목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며, 통합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의 시제는 통합과정에서의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

21) 통합은 크게 개체 내 통합과 개체 간 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체 내 통합이란 하나의 개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부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면, 개체 간 통합은 서로 이질적인 개체들을 하나의 개체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가 국가통합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지역통합이 대표적 사례이다. 남북통합은 원래 하나였던 개체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졌다가 다시 하나의 개체로 통합되는 것이므로 개체 내 통합, 즉 국가통합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개체 내 부분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개체 내 통합의 촉진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체 간 통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민족주의는 민족통합의 촉진제로서 기능한다면 지역통합에는 억제제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U 통합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핏줄,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프랑스가 EU 통합의 가속화를 제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로 민족주의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바탕위에서 개체 간 통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은 기능주의적 통합의 길을 걸은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가 갖는 정치적 자결(自決) 요구는 외적으로는 배타성과 내적으로는 응집력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남북한의 현실에 적용하면, 다소 상이한 추론이 가능하다.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응집해야 할 남북관계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 거의 50년 이상 동안 분열적이고 대립적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자 더 많은 우군(友軍)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극심한 체제경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견지했지만, 남한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견지하여 한·중, 한·소 수교를 견인했다. 다행히 북한은 EU와의 관계 개선, 북·일, 북·미 수교 의지 등 배타적 대외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선택적인 개방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남한은 북한의 이러한 시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통합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22) Hans Kohn, "Nationalism," p.65.

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민족주의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남북통합을 위한 기회가 증진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통합기회의 증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민족성과 국제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민족주의화와 국제주의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한이 민족통합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민족성과 국제성을 모두 갖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 역시 민족주의화와 국제주의화를 조화시켜나가야 한다. 결국,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접근방식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협조를 유도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해결의 민족주의화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을 정당화하는 이념은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 현 시대는 국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국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사회적·경제적 공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이야말로 가장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의 대외적 성격으로 알려진 배타성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지역통합 및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국제협력 및 세계평화와의 보완관계에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부연하자면, 열린 민족주의란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민족주의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관계에서 폐쇄성을 지양하고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관련, 남북통합으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르는 한반도로부터의 위협요인 증대에 따른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한 개방성과 더불어 평화지향성을 부단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탈(脫)중심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세계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탈(脫)민족주의가 확산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입장의 이면에는 한국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자민족 중심주의적이며 권력화의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깔려있다.<sup>23)</sup> 이러한 비판은 한국민족주의가 국민주권적 전통에 뿌리내리 못하고 문화민족적 성격에 여전히 잔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지만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해 온 분단체제의 현실과 민주화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민족주의에 착목할 필요성이 있다.

상이한 인종과 문화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으로 뭉쳐진 국가민족처럼 상이한 이념체제와 정치·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분단국가 내 두 개의 부분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민족주의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종민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종민족의 핵심 요소는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의식이다. 우선 남북한 간에는 다소 이질화된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 간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비롯한 전통적 생활방식이 여전히 유사하다. 특히,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에서 나타난 남북한의 공동노력은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sup>24)</sup>

그러나 문제는 민족의식에 있다. 특히, 남북한 사이에는 아직도 그

---

23)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서울: 솔, 2000);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서울: 소나무, 1999).

24) 남한의 「한일불교복지협회」와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은 2005년 3월 28일 베이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북관대첩비 반환사업 관련 남북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 차원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들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타자관(他者觀)이 동포관(同胞觀)보다 더 우월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군인들 사이에 불미스런 충돌사태가 발생하여 남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죽어갈 때 죽어가는 상대방 군인을 욕하기보다는 아픔을 공유할 줄 아는 동포의식이 바로 분단국가가 추구해야 할 민족의식이자 민족주의의 참다운 발현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북한의 용천사태 발생 후 남한국민들의 자발적인 구호 및 재건 지원활동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을 열린 민족주의의 한 부분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상호 부조와 협력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sup>25)</sup> 다만,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갖는 기본 속성인 내적 응집력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되, 외적 배타성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2) 인종민족적 요소의 유지와 국민민족적 요소의 확대

새로운 민족정체성은 과거처럼 위로부터의 강압과 권위에 의해서나 먼 상고사의 위대한 전통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적 민주화에 의해 뒷받침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집단적 정체성’에 의해 가능하다. 내가 다른 구성원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서 어떤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 공동체에 대해 갖는 소속감과 충성심은 성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찰적으로 만들어진 민족정체성은 문화나 혈통

---

25) 여러 학자들이 ‘한반도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명과 민족주의가 복합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용어상으로 부적절하다. 박호성은 한반도 민족주의의 개념을 민족구성원 상호 간의 민주적 동등권, 민족통일, 그리고 민족자주의 쟁취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박호성, 『남북한민족주의 비교연구』(서울: 당대, 1997), 151쪽.

에 의해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서 다소 유동적일지 모르지만, ‘문화민족’이나 ‘저항민족’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성원들의 헌신성을 유도하는 ‘열린’ 정체성이다. 결국 내가 다른 구성원들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참여한 민족과 국가라는 의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애국심이 새로운 열린 민족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다.<sup>26)</sup>

남북통일은 혈통, 언어, 생활방식 등을 포함한 민족동질성의 회복이자 궁극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친 제도의 통합이다. 특히 제도 통합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문화민족적 요소만을 통해서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 민족적 요소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적 시민교육이 효과적이다. 시민교육을 통해 민족주의는 국민들에게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애국주의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통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열린 민족주의는 어떤 류의 강제와 강요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도덕성을 갖춘 민족주의라는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 이념은 민주주의와 결합되어 전체로서의 민족이익과 개체로서의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sup>27)</sup>

둘째, 최근 한류(韓流) 여파는 문화란 우열이 아니라 단지 차이일 뿐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전형적 사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문화들 간에 상호 흡입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

26) 배성인,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20쪽.

27) 정지웅,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2004년 여름), 236쪽.

주는 좋은 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화의 국제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지역에서 이러한 문화적 국제성의 확산은 우리 국민들의 대북(對北) 정체성이 인종민족을 넘어 국민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제공한다.

### 3)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조화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의 성격은 남북한이 문제해결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민족성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국제성이 결합되어 있다. 예컨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남북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동북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균형의 문제, 엄밀히 말하자면 민족주의화에 기초하면서 여기에 국제주의화를 조화시키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의 특성상 민족성과 국제성이 제로섬의 관계에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이 강화될 경우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 여부와 같은 사안들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우세한 상황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하에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을 추구했다. 그 결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

지위라는 민족주의적 입장에 기초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완화라는 국제주의적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접근방식은 국제관계에서 한미관계의 악화라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한편, 민족주의화를 우선시하면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대가로 나머지 5개국들은 북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민족주의화에 입각할 경우 한국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지원 상황과 마찬가지로 명분상 대북 지원 시 지극히 불리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이슈에 따라 남북한 당사자의 역할이 큰 분야가 있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큰 분야가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간 경협, 사회문화협력, 긴장완화, 인도주의 문제 등은 남북한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이지만 핵·미사일문제, 한반도평화체제, 다자간 경제·과학·기술협력 등은 국제협력이 중요한 분야라는 것이다.<sup>28)</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문제가 국제성과 민족성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 사안들에 대해 당사자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주변국가들로부터는 ‘한반도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사안이든 민족적 사안이든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당사자의 지위, 즉 민족주의화를 우선

---

28) 박종철,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 박종철 외,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3), 50쪽.



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 다음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에 따른 측면, 즉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주변국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경우 그 혜택에 따르는 비용을 분담하고, 반대로 독일통일처럼 관련국들의 비용을 수반할 경우 그 비용에 따르는 보상을 제공 또는 요구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를 테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시 남북한은 주변 관련국들로부터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가 되는 대신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주변 관련국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과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 관련국들에게 기존 동북아질서의 변화라는 비용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통합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우선 통합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인종민족이라는 고유의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화적 자결에 기초하여 정치적 자결로 나가야 한다는 한스 콘의 입장에 동의했다. 남북한은 혈통·언어·관습에 기초한 인종민족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에 기초한 근대적 국가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북한은 상이한 민족주의의 발전 과정을 경험해 왔지만 북한은 체제결속 및 남북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남한은 연성국력의 강화 및 지역통합의 수단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향후 체제통합과정에서 효과적인 통합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했다. 동시에 남북관계 적 측면에서 보면, 민족주의 명분하에 남측은 수여적이고 북측은 수혜적이라는 비호혜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북측의 일방적인 민족공조 공세는 오히려 민족공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문화와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남북관계가 과거의 냉전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주변국의 동침이 불가피한 현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태도임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통합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민족주의의 기본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배타성을 최소화하고 외적 수용을 통해 내적 응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린 민족주의를 내세워야 한다. 둘째, 한민족의 고유한 특성인 인종민족적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합이념으로서의 국민민족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한반도의 통합은 다양한 경로로 전개될 수 있다.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경로를 거칠 수도 있는가하면,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분쟁적이고 급진적인 경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족주의는 분명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경로를 거친 통합과정에서 통합이념으로서의 가치와 효용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쟁적이고 급진적인 경로를 통한 통합과정에서도 민족주의가 그 가치와 효용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제로 남긴다.

■ 접수: 2월 25일 / ■ 채택: 3월 26일

## 참고문헌

- 고영환, 『조선민족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1989).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서울: 숲, 2000).
-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2009년 상반기호).
-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1989),” 『김정일 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혜연,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평양: 평양출판사, 2002).
- 박종철,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 박종철 외,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박호성, 『남북한민족주의 비교연구』(서울: 당대, 1997).
- 배성인,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14권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서동만, “북한체제와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4호(2002).
- 서재진, “북한의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1993).
- 위르겐 코카 지음, 김학이 옮김, 『독일의 통일과 위기』(서울: 아르케, 1999).
- 이용희, 『미래의 세계정치』(서울: 민음사, 1997).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서울: 소나무, 1999).
- 정지용,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2004년 여름).
-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II』(서울: 푸른세상, 2002).
- 한승완,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 철학』, 제1호(2001).
- 한중수, “독일의 국가연합과 한반도 통일방안,”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2호(2002).
- 황병덕,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Dierse, U. und Rath, H., “Nation, Nationalismus, Nationalitat,” in Ritter J. und Grunder, K.(Hg), *Historisches Woerterbuch der Philisophie*, Schwabe & Co.,·AG.Verlag, 1984.
- Evans, Graham & Newnham, Jeffrey,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New York: Penguin Books, 1998).

Kohn, Hans, "Nationalism,"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1(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Mamora, L., *Nation und Internationalismus*(Dortmund, 1983).

Meinecke, H., *Welt rgetum und Nationalstaat*(Muechen, 1969).

## Inter-Korean Unity and Nationalism

Lee, Gee Dong(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nationalism as a unified ideology and its direction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integration. First of all, I agreed Hans Kohn's position that nationalism as a unified ideology should go forward to political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cultural-self-determination. And I forecasted that nationalism will be very useful ideology because of increase of the mutual needs, even though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experienced different process of nationalism. Simultaneously, in the view of inter-korean relationship, I referred that South has been largely given position, North vice versa, this non-reprocity relation may undermine national cooperation. In the view of international aspect,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try to see getting out of the confrontation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e era of cold war. Historically and structurally, we need to take open stance on issues that is inevitable for engagement of international society. I suggested three directions in term of nationalism as a unified

ideology. First, we have to stand for open-nationalism, in the purpose to minimize the exclusive trait, to strength internal cohesiveness. Secondly, we require to build up Volknation. Thirdly, we have to devise th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Keywords: Nationalism, Open-nationalism, Volknation, Staatsbuerger-  
nation